

민형배 당선인 통합특별법 보완 건의하나

오늘 총리 주재 통합시 기관 간담회...출범준비 점검 시행령 통과 예정...재정·권한이양 후속 과제 논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

된 통합특별시장·교육감과 함께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광역행정통합의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한다.

지자체에서는 민 당선인과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통합특별시 인수위

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이 함께한다.

공식 안건은 행정통합 주요 추진 경과, 통합특별시 분야별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교육 분야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다.

특히 간담회 당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행령 제정 이후 남은 후속 과제를 총리에게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제처가 심사를 마친 시행령안 의안 표지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일부 보조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두고, 구체적 재원 규모와 이행 시기는 모두 별도 예산편성 절차로 남긴 것이다.

시행령에는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참여 중앙행정기관 범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임면·징계 권한, 중앙행정기관장과 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조정 절차 등도 구체화 돼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출범과 지원위원회 가동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지만 20조원 지원의 구체적 재원과 지원 방식, 연차별 투입 기준, 중앙 권한 이양 범위, 부처 간 이견 조정의 구속력 등은 후속 논의와 별 개정 과제로 남는다.

민 당선인은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보완"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맞게 행정·재정·산업·에너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이 선언적 약속이나 개별 부처 사업 배분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법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당선인 인수위 측 관계자는 "공식 일정상 당선인이 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은 잡혀 있지 않지만, 총리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재정 문제나 관련 법 추가 개정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본다"며 "간담회 직전이

라도 관련 내용은 정리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건의할지 최종 정리는 아니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인수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이어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18일에는 전남 무안 국립목포대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완도 SOC 사업 설명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완도 고금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완도 SOC 사업(고금 청용~상정 국도77 등) 설명회'에서 주요내빈들과 완도군 SOC 성공추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전남광주 통합 앞두고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

27~28일 건축물대장·30일 오후 6시부터 등초본 중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49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한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이날 27~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수도요금 조회, 지방재정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5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행정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에 한해 제한되며, 나머지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누리집 등 5종의 대민 서비스도 함께 멈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통합특별시, 국가 AI 대전환 실증 거점으로 성장해야”

전남연구원, 산단·데이터센터·농업 등 'AX 생태계' 구축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접목하는 'AI 전환(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15일 발간한 전남정책연구를 통해 'AI 전환(AI) 국가전략의 지역 구현: 전남·광주의 산업·사회 AX 생태계 구축 방안'을 특집 주제로 다루고, 전남·광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AI 전환이 단순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구조와 지역 성장 모델 자체를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남·광주는 재생에너지와 국가산업단지, 농생명산업 기반, 넓은 산업용지 등 AI 시대 핵심 자산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석유

화학산업, 농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AX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여수국가산단과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과 제조 AI, 로봇, 자율제조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석길·송주연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수국가산단과 대불국가산단이 정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제조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산업의 AI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 솔루션연구센터장과 여주미 선임연구원원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디지털 트윈, 자율제조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생산의 핵심 거점인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AX 실증사업과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용철 국가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위원은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 냉각설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RE100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기업의 AI 연산자원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열 활용과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무안군이 국가 농업 AX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주목했다. 신종일 전남테크노파크 신산업기획실

장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AX가 필수”라며 “생산·유통·소비 데이터를 통합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과 AI 기반 영농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농기계와 첨단 AI 온실, 스마트 농업 실증단지 등을 연계해 데이터 생산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업 AX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SOC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유은진 LX공공정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량과 도로, 하천, 도시 인프라에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위험 예측과 선제적 유지관리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표준화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이란戰 106일만에 종료...미·이란 “19일 서명”

19일 스위스서 MOU 서명식...트럼프 참석 여부 주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 >관련기사 4·6·1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후 5시 30분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카제미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전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의 사실

을 전했다. 이로써 미·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이날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지 두달여 만이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카제미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전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의 사실

을 전했다. 이로써 미·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이날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지 두달여 만이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면 ‘기업 지방투자’서 계속

김 총리는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 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도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5국3특 발전 전략을 지

이 대통령 ‘광주 우선’ 언급...공공기관 유치전 탄력

▶1면에서 또 행정사 최초로 광역행정 통합을 이룬 광주특별시를 언급하며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통합)한 곳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에서 광주특별시가 타 시도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정부의 제2차 공공

기관 이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TF(특별팀) 성격의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단은 시도 행정통합을 전제로 에너지와 농수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목표기관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22개 기관은 이달말까지 직

접 때문에 광주전남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전대상 기관들을 찾아가 이전을 설득하는 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권역별 성장엔진과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한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광역단체장 당

선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성장 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특별시가 출범하자마자 받게 될 첫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광란 광주특별시 인수위 대변인(특별시지원)은 “지난주 양 시도의 보고를 받고 분과별로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이 ‘2차 이전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당부하는데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